

# 『경찰청 범죄통계』

## 통계정보보고서

2023.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5.03.25.



**경찰청**

## <차 례>

I. 통계개요 .....	1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	7
III. 통계설계 .....	8
IV. 자료수집 .....	13
V. 통계처리 및 분석 .....	14
VI.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	16
VII.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	21

##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범죄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개요,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통계 결과 및 공표, 이용자 서비스, 통계 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 I. 통계개요

## 1. 통 계 명

경찰청범죄통계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 132004)

## 2. 법적근거

-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483호, 2024. 5.24.)
-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1091호, 2023.7.31.)

## 3. 작성방법

-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고소·고발, 인지 등을 통한 형사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범죄통계원표(발생, 검거, 피의자)입력→승인→배치작업의 단계를 거쳐 범죄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집계

##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

## 5.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주기 : 1년
- 공표주기 : 1년, 분기(잠정)

##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범죄통계원표 작성
  - 각하·즉심 등 일부를 제외한 입건 사건 모두에 대해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발생, 검거, 피의자 원표를 작성
  - 팀장 또는 범죄통계 담당자의 원표 검토와 승인
  - 매일 00시 범죄통계시스템(CSS)에 새로 승인된 원표 반영작업(배치, batch) 시작, 통상 08시경 완료
- 데이터 기반 치안행정의 기초가 되는 ‘범죄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통계원표의 오류(추정) 자료를 점검 및 수정(2월말~5월말)
  - 각 경찰관서의 담당 수사관이 오류 추정자료를 확인하고 원표자료 수정

- 수정자료를 취합하여 재검토하는 과정을 3차례 반복하여 오류 수정
- 범죄통계 확정하여 8월경 경찰청 홈페이지 공표, 「범죄통계」 책자 발간 및 국가통계포털 등재

## 7. 통계연혁

□ 최초 개발시기 : 1962년

□ 개발 배경

- 각종 범죄현상에 대한 치안정책 수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목적으로 경찰범죄통계 개발

○ 범죄통계 연혁

연도	내 용
1962.8월	·서울시 경찰국, 범죄통계원표 도입
1963년	·중앙정보부, 월간 「범죄분석」 발간하다가 12월 대검찰청으로 업무이관
1964년	·대검찰청, 분기별 「범죄분석지」 발간·배포(1964~1992)
1967년	·내무부훈령 제202호로 「경찰범죄통계 규칙」 제정
1983년	·경찰청 ‘범죄분석’ 발간으로 연 1회 범죄통계(106종) 분석 개시 - Dos방식의 전산시스템 개발로 사건담당자가 종이원표를 작성, 전산실에서 일괄 입력하면 본청 서버에 저장 - 월 1회 전산용지로 인쇄하여 각 경찰관서에 탁송하는 체제
1993년	· 「범죄통계 개선(대검예규 범분(기획) 제215호)」 대검예규 제정 - 대검찰청에서 각 수사기관의 범죄통계원표를 수집하여, 총무처(정부 전자계산소)에 일괄전산처리를 의뢰하던 기존방식에서 개정된 범죄통계원표 양식에 맞게 경찰과 지검 및 지청에서 자체 전산입력한 뒤 대검찰청(정보통신과)에서 전산처리토록 개선 - 기존 분기별로 발간하던 「범죄분석지」를 연 1회 발간하는 한편, 범죄현상의 변화에 맞게 범죄통계원표 양식 일부를 개정하고 ‘범죄통계원표 작성·기재요령’ 제작
2000.8월	·컴스탯(CompStat) 도입으로 실시간 범죄분석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서 전산실에서 일괄 입력하는 발생·검거·피의자통계원표(202통계)와 별도로 컴스탯에서 분석
2004년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도입 - 2002.12월~2003.12월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구축, 검찰과 협의하여 종이원표(발생·검거·피의자통계원표) 폐지 후 사건 담당자가 각

연도	내 용
	<p>원표 내용을 전산망(사건수사시스템)을 통해 입력·전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통계시스템(Crime Statistics System) 개발로 쏘 수사관이 소속 관서의 정형화된 범죄통계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조회한 통계표를 엑셀, PDF, 한글파일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li> </ul>
2007.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간책자의 명칭을 ‘범죄통계’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 ‘범죄분석紙’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紙’와 구분하기 위해 ‘범죄통계’로 명칭 변경</li> </ul> </li> </ul>
2007.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기록물로 등록(발간등록번호 : 11-1320000-000029-10) 국가기록원에 보존</li> <li>·통계청 승인(승인번호 : 13204)으로 국가공식 통계로 인정(승인일자 : 2007-11-28)</li> </ul>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경찰청 범죄통계 제공, 대국민 공개</li> </ul>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경찰범죄통계규칙(경찰청훈령 제384호)」 폐지,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훈령 제554호)」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수기통계원표가 전산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통계원표 주관부서를 기존 정보통신관리관실에서 수사국으로 변경</li> </ul> </li> <li>·공표서식 변경(139개 항목→141개 항목(삭제 1항목, 추가 3개항목)(승인일자 : 2009-0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사유 : 공표항목 추가 및 내용이 유사한 항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0.여성범죄자 구속불구속별 최종현황에서 전과자 구속불구속별 최종현황으로 변경</li> <li>▶ 140.변사자 발생표, 141.유치장 수용관계 통계표 추가</li> </ul> </li> </ul> </li> </ul>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간·강제추행 최종 분류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법으로 분류하였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구법포함)’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구법포함)’內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조항은 강력법의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포함하여 집계</li> </ul> </li> </ul>
2010.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제편철 등 사건 종결시에도 발생원표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개선</li> </ul> </li> </ul>

연도	내 용						
2012년	<div>·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범죄통계 공동분석</div> <div>·‘2011 범죄통계’부터 구성 변경</div> <div><div><div>－ 개요에 국민적 치안과 밀접한 6대 지표범죄(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선별하여 별도 분석</div><div>－ 범죄분류를 기존 형법·특별법 분류체계에서 위반행위속성 및 법익침해 유형별로 재분류</div></div><table><tr><th>기존</th><th></th><th>변경</th></tr><tr><td><div>형법</div><div>강력범</div><div>절도범</div><div>폭력범</div><div>지능범</div><div>풍속범</div><div>기타형법</div><div>특별법법</div></td><td>⇒</td><td><div>강력범죄</div><div>절도범죄</div><div>폭력범죄</div><div>지능범죄</div><div>풍속범죄</div><div>특별경제범죄</div><div>마약범죄</div><div>보건범죄</div><div>환경범죄</div><div>교통범죄</div><div>노동범죄</div><div>안보범죄</div><div>선거범죄</div><div>병역범죄</div><div>기타범죄</div></td></tr></table><div><div>－ 범죄대분류 15개, 범죄중분류 36개, 범죄소분류 377개로 분류</div><div>－ 살인범죄를 ‘기수’와 ‘미수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 제시</div><div>－ 범죄발생장소에 ‘백화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주차장, 공중화장실, PC방’을 별도 제시</div><div>－ 강도수법을 ‘침입강도’와 ‘비침입강도’로 분류하여 제시</div><div>－ 절도수법은 ‘침입절도’만 세분화 하였던 것을 ‘비침입절도’, ‘기타’로 구분하여 특수물 절도 등을 세분화 하여 추가 제시</div><div>－ 범죄자 국적별 현황에서 기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기타 외국’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태국, 대만, 러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파키스탄, 기타’로 세분화하여 제시</div><div>－ 범죄자 유형분석에서 ‘외국인범죄자’와 ‘고령범죄자(65세 이상)’에 대해서 별도 분리하여 분석함</div></div><div>·입건된 촉법소년 사건 처리시, ‘KICS 입건취소 지시(여성청소년과)’로 기승인된 발생원표 취소 후 소년부 송치</div></div>	기존		변경	<div>형법</div> <div>강력범</div> <div>절도범</div> <div>폭력범</div> <div>지능범</div> <div>풍속범</div> <div>기타형법</div> <div>특별법법</div>	⇒	<div>강력범죄</div> <div>절도범죄</div> <div>폭력범죄</div> <div>지능범죄</div> <div>풍속범죄</div> <div>특별경제범죄</div> <div>마약범죄</div> <div>보건범죄</div> <div>환경범죄</div> <div>교통범죄</div> <div>노동범죄</div> <div>안보범죄</div> <div>선거범죄</div> <div>병역범죄</div> <div>기타범죄</div>
기존		변경					
<div>형법</div> <div>강력범</div> <div>절도범</div> <div>폭력범</div> <div>지능범</div> <div>풍속범</div> <div>기타형법</div> <div>특별법법</div>	⇒	<div>강력범죄</div> <div>절도범죄</div> <div>폭력범죄</div> <div>지능범죄</div> <div>풍속범죄</div> <div>특별경제범죄</div> <div>마약범죄</div> <div>보건범죄</div> <div>환경범죄</div> <div>교통범죄</div> <div>노동범죄</div> <div>안보범죄</div> <div>선거범죄</div> <div>병역범죄</div> <div>기타범죄</div>					

연도	내 용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 범죄통계」 부터 ‘범죄자의 특성 및 유형 등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소중지 등 미검거 피의자’를 제외하고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통계 분석 및 자료 산출</li> <li>· 사회인구학적 분석 및 범죄자 유형 등에서 각 통계표별 미입력된 자료를 ‘미상’항목 추가하여 별도 제시</li> <li>· 부록을 추가하여 세부죄명표 및 전년도 발간한 자료의 정오표 제시</li> </ul>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방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6월 형법 및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의 시행 및 개정으로 기존 ‘강간 및 강제추행’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강간·강제추행)’로 세분화하고, 폭력범죄의 약취·유인분류에 ‘인신매매’관련 소분류를 별도 분리하여 추가 제시</li> <li>－ 지능범죄 중 ‘증수뢰’ 범주에 ‘특경법(알선수재)’, ‘특경법(수재등)’, ‘특경법(증재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증수뢰’는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죄명이기 때문에 이를 ‘증수뢰’에서 제외하고 ‘배임’ 범주로 재분류</li> </ul> </li> <li>· 범죄분류명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나열한 ‘범죄상세분류명’을 간소화함 EX. (현주·현존·공용·공익·자기소유·일반)자동차방화 → 자동차방화</li> </ul> </li> </ul>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류방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분류되어있던 것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기타)으로 세분하여 제시</li> </ul> </li> <li>· 범죄 최종 대분류 15개, 중분류 39개, 소분류 458개로 분할</li> <li>· 개요의 각 지표 범죄별 분석에 ‘범죄자 국적’과 ‘범죄자 범행동기’를 추가 분석하여 제시</li> <li>· 치안정책연구소 「범죄통계 분석센터」 와 범죄통계 공동분석</li> <li>· 다른 통계표와 내용 중복 및 인권위원회 인권 침해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정확한 데이터 수립이 어려운 항목 삭제(12개표), 정책활용도가 높은 통계표 개발 및 추가(25개표) (승인일자 : 2015-11-24)</li> </ul>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보복범죄를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특가법(보복범죄등)을 행위 유형에 따라 ‘보복살인등’ ‘보복상해등’ ‘보복폭행등’ ‘보복체포·감금등’ ‘보복협박등’으로 세분화하여 범죄소분류를 463개로 확대</li> </ul> </li> <li>· 개요의 각 지표 범죄별 분석에 ‘범죄 발생 장소’ 추가분석</li> </ul>



연도	내 용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류방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범죄의 특수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중), 특수상해(상습), 특수상해(특수)), 약취·유인 및 공갈 소분류 신설</li> <li>- 지능범죄의 부정청탁금지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소분류 신설</li> </ul> </li> <li>·범죄 최종 대분류 15개, 중분류 39개, 소분류 464개로 분할</li> <li>·일러두기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일러두기에서 누락되었던 통계항목별 출처와 산출과정 설명추가</li> </ul> </li> <li>·발생비 산출방식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 범죄통계」까지는 발생비 계산을 위해 해당년도 추계인구를 사용하였으나, 「2016 범죄통계」 부터 행정자치부의 해당연도 실제 주민등록인구 사용</li> </ul> </li> </ul>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피해자 중심의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장 주요지표범죄분석에 ‘범죄피해자 통계 분석’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5년간 주요범죄(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의 피해자 성별 구성비 변화 분석</li> <li>- 최근 5년간 피해자 연령 및 피해결과 변화 추이 분석</li> </ul> </li> <li>· 범죄 최종 대분류 15개, 중분류 39개, 소분류 466개로 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범죄의 교육환경법, 정신건강복지법 소분류 신설</li> </ul> </li> </ul>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범죄자 소속기관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현원대비 입건을 신설</li> <li>·‘14세미만’ 범죄자 통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제외</li> <li>·범죄 최종 대분류 15개, 중분류 39개, 소분류 467개로 분할</li> </ul>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청 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일러두기에 개선과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작성방법론 및 작성 법적근거 추가</li> <li>- 통계의 주요 개념 추가</li> </ul> </li> </ul>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 최종 대분류 15개, 중분류 39개, 소분류 469개로 분할</li> <li>· 경찰청범죄통계 공표주기 변경 승인, 년(年)통계 외 분기별 잠정통계 대국민 공개</li> </ul>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사소송법 개정('21.1.1.시행)으로 인해 피의자원표 상 송치의견이 사법경찰관 결정으로 변화</li> <li>·범죄 최종 대분류 15개, 중분류 39개, 소분류 469개로 분할</li> </ul>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 최종 대분류 15개, 중분류 39개, 소분류 480개로 분할</li> <li>·공표서식 변경승인(삭제 14항목, 추가 13개항목, 변경128개 항목) (승인일자 : 2022-12-22)</li> </ul>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범죄통계」 개선된 범죄통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범죄특성 및 사회적 현안에 따른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수집이 필요한 항목 및 항목값 신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범죄자’를 ‘피의자(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로 용어 변경하여 제시</li> <li>- 상세한 범죄관련 정보를 위해 발달장애 여부, 피해자유형 등 피해자 및 피의자 특성 항목 개선</li> <li>- 수사단서, 범죄수법, 발달장애 피해자, 발생지, 발생장소, 피해품/회수품, 범행도구, 직업, 공범관계, 피해자유형, 범행시정신적장애여부, 범행동기 등 항목값 변경하여 제시</li> <li>- 최근 5년간 주요 범죄유형별 추이 분석에 ‘지능범죄’ 추가하여 분석</li> <li>· 「2023 범죄통계」 부터 2장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검거인원’에서 피의자중지 결정된 인원을 제외하여 제시</li> <li>· 범죄 최종 대분류 15개, 중분류 39개, 소분류 489개로 분류</li> <li>· 「2024 범죄통계」 부터는 해양경찰청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li> </ul>
--	--

##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 1. 통계의 작성목적

#### ☐ 통계작성 목적

- 치안정책 수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와 예산, 인력, 장비배치 등 경찰의 효율적 경력운용 및 과학적인 치안활동 계획의 기초자료로 사용

#### ☐ 주된 활용분야

- 통계수요기관 부처 및 국회 정책수립 시 요구자료 제공
- 국민의 알권리 충족
  -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민원요청에 대한 보유 통계자료 제공
- 다양한 범죄통계 분석수요에 부응하고 맞춤형 치안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 주요 이용자 및 유형별 용도

- 주요 정부기관
  - 범죄동향 분석 등을 통한 형사정책 수립 등
- 지방자치단체
  -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통계자료 활용

- 학계 및 연구단체
  - 각 기관의 업무, 범죄현상 연구 등
- 민원인(개인)
  - 각종 범죄현상에 대하여 개인별 연구자료 및 학업관련 자료

### 3. 이용자 의견수렴

- 경찰 범죄통계 관련 연구 진행
  - 2012년 경찰청 주관 「경찰 범죄통계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 실시
  - 2016년부터 경·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31회 협의 진행
  - 2022년 치안정책연구소 책임연구과제 「경·검 공식범죄통계 개선안 학술 타당성 검토연구」 진행
  -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중 개선이 필요한 발생·검거·피의자원표 항목값 추가 및 항목명 변경 반영
  -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T/F운영
- 주요 개선 사항(2023년 통계)
  - 신종범죄유형 등 최신 범죄경향을 반영하여 통계 산출항목 조정
  - 피해자 특성에 따른 범죄분석을 위해 범죄피해자 유형 세분화 개선
  - 법령 개정으로 송치의견으로 산출되던 정보를 사법경찰관 결정으로 반영
  - 향후 발생일 특수사정, 범행시 일기, 생활정도 등 범죄와 관련없는 항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입력항목을 정리
  - 발생지에 해외 추가, 기존 시단위 현황을 군단위까지 확대
  - 통계 관련 용어 개선 및 산출기준 개선
    - \*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불송치 사건을 포함하고, 중국처분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범죄자’로 통계 산출하던 문제를 개선하여 ‘피의자’로 명칭 변경

## III. 통계설계

### 1. 보고양식 설계

#### 1-1 개념 및 정의

#### ☐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정의(2023년 범죄통계 기준)

-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발생건수’
  - 한 해 동안 형사사건이 발생한 수사기관에서 입건하여 통계원표를 승인한 사건수

-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에 의해서 인지·처리된 사건은 제외(2023년까지 경찰청범죄통계는 해양경찰청을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나, 2024년부터 해양경찰청은 자체 산출하여 공표하므로 수치비교에 유의하여야 함)
- 실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이 집계된 것은 아니며, 원표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범죄발생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범죄사건 처리기간, 구속·불구속상황, 사법경찰관결정>의 ‘인원’
  - 피의자중지 결정을 포함한 피의자원표가 작성·승인된 전체 피의자의 수(인원)이며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검거인원’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
- <범죄의 발생지> 발생지 항목은 총 230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크게 한국과 외국으로 구분되었음. 한국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행정구역 단위상도(都)로 구분하였으며 외국은 16개 국가와 ‘기타국가’로 구분됨
  - 창원시와 마산시의 경우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창원시’로 표기
  - 지역별 나열순서는 특별시, 6개 광역시 [구(郡)] 순으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권역(‘도’ 단위)의 도시들은 시(市), 군(郡) 순으로 구분
- 피의자 특성
  - 피의자특성 분석 시 법인피의자, 피의자중지자, 성별미상자는 제외함(2011년까지는 기소 중지자를 포함하여 분석함)
  - <피의자 범행 시 연령>의 ‘14세미만’은 소년피의자 처리규정 상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미만)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피의자 원표를 작성하지 않음(2017년까지는 ‘14세미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통계비교시 주의)
  - 피의자 혼인관계는 기혼(사실혼 포함), 미혼, 그리고 미상으로 분류
  - <피의자 범행시 성별 정신적장애 여부>의 항목분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에 따라 ‘정신장애’와 ‘발달장애’로 구분
  - <피의자 전과 여부 및 횟수>의 ‘전과’ 및 ‘미상’
    - 전과는 피의자가 과거에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확정된 경우임.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은 것은 전과에서 제외
    - 책임송치의 경우에만 피의자의 전과를 필수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불송치 및 기타의 경우에는 미입력되기도 함. 미입력된 경우 「2012범죄통계」 이후로는 ‘미상’으로 분류하였고, 「2011범죄통계」 이전에는 ‘없음’으로 집계 되었으므로 연도별 비교시 주의
  - <피의자 범행시 직전처분 종류>의 ‘직전처분’ 및 ‘미상’
    - 직전처분이란 본사건 직전의 처분내용 또는 그 집행상황을 의미하며, 피의자에게 진행 중인 직전 형사처분의 집행상황(수배중, 집행유예중, 보석·형집행정지중), 진행 중인 처분이 없을 경우, 과거에 받은 처분내용 중 가장 최근의 형사적 처분내용(즉결심판,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가석방, 형집행정료, 감호소출소 등)이 입력되며, 전과뿐만

아니라 전과에 미치지 못하는 형사처분(기소유예, 보호처분)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임  
 · 범행시 직전처분은 책임송치의 경우에만 필수입력사항으로 지정되어있어 불송치시에는 미입력 되기도 하며, 미입력 된 경우 「2011 범죄통계」 이전까지는 ‘없음’으로 집계되었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는 ‘미상’으로 분류

－ <재범자 재범종류 및 기간>의 ‘재범’

· 재범의 의미는 본 건 이전의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이 결정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집계된 것으로 ‘전과’가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만을 집계하는 것인 반면, ‘재범’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 피의자 수와 재범자의 수는 일치하지 않음

－ <피의자 공범관계>의 ‘미상’

· 「2011범죄통계」까지는 공범관계가 미입력된 경우 ‘단독범’에 포함시켜 집계하였으나 「2012범죄통계」부터는 ‘미상’으로 분류

○ 피해자 특성

－ <대표 피해자 성별 연령>

· 한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은 주된 사람 피해자 1명에 대한 정보임  
 · 「2022범죄통계」 이전까지는 피해자의 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불상’으로 집계하여 작성하였으나, 「2023범죄통계」부터는 전체범죄 발생건수에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발생건수를 제외하고 작성함, 따라서 전체범죄 발생건수와 대표 피해자 수는 일치하지 않음  
 ·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지만 성별을 알 수 없거나 사람·법인·국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미상’으로 집계

－ <발달장애 대표피해자 성별 연령>의 ‘발달장애 대표 피해자’

· 대표 피해자 중 범죄 발생 당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에 해당하는 주된 피해자를 의미

－ <전체 피해자>

·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국가 및 국적·성별에 따라 확인된 전체 피해자·단체의 수 만큼 피해자를 집계

○ 피의자 유형에서 사용된 ‘피의자’는 형사 피의자를 뜻하며 수사 중인 범죄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는 무관함

○ 미성년피의자는 범행당시 연령이 19세 미만(만18세 이하)인 피의자

○ 학생피의자는 범행당시 직업이 학생(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인 피의자

○ 공무원피의자는 직업이 공무원인 피의자

○ 전과피의자는 본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의자

○ 정신적장애피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장애 유형에 따라 범행 당시에 피의자나 보호자의 진술 또는 정신의학자에 의한 진단서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정신장애 의심자,

발달장애 의심자는 전문의 진단이나 증명자료는 없으나 주변 진술이나 상황 등을 바탕으로 수사관이 해당 장애를 의심할 여지가 있는 피의자

- 외국인피의자는 범행당시 외국국적을 가진 피의자
- 고령피의자는 연령이 65세 이상인 피의자

## 1-2 적용 분류체계

### □ 분류 체계

- 경찰범죄분류의 기본원칙
  - 범죄통계의 각 죄명분류는 “위반행위속성(범죄행위의 내용적 특징)과 법익침해유형(범죄행위의 결과적 특징)”을 기준으로 하며,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을 경우 위반행위속성을 제1분류원칙으로 함
- 최종분류에 있어 「2011 범죄통계」 부터는 강력, 절도, 폭력, 지능, 풍속, 특별경제, 마약, 보건, 환경, 교통, 노동, 안보, 선거, 병역 및 기타범죄의 15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범죄 실태 파악 및 분석에 중요한 죄종이 순차적으로 추가되어 2012년 398개, 2013년 419개, 2014년 459개, 2015년 463개, 2016년 464개, 2017년 466개, 2018년 467개, 2020년 469개, 2021년 472개, 2022년 480개, 2023년은 489개의 죄종 소분류로 확정
- 특별법 위반범죄의 경우, 「2011 범죄통계」 부터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따라 분류하되 기존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형태의 특별법은 형법범에 통합하여 집계
  - \* 2011년~2023년 죄종(대분류-중분류-소분류) 변경사항은 「2023 범죄통계」 부록 참조

## 1-3 보고양식 구성

### □ 보고양식 (항목)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
항목개수	32	30	42
승인관서	발생관서 (해외는 피의자주소지)	최종 송치관서	최종 송치관서
작성시점	입건 직후	1명이상 검거 이후 송치 이전	송치 이전
작성원표	사건	사건	피의자
작성예외	군사법원 관할, 각하의견 송치, 소년부송치, 즉심(검찰송치 제외)		

- 보고양식의 구성 및 변경과 관련한 내·외부 전문가 회의내용
  - 현재와 맞지 않는 낙후된 항목 수정, 불필요한 항목 삭제하고 현대범죄 특성에 맞춰 새로운 신규항목 신설 및 항목값 개선
  - 원표 개선 이후에도 과거 통계와 비교 분석이 가능하고, 입력 절차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일선 입력 업무 부담 최소화

##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은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고소·고발, 인지 등을 통한 전체 범죄사건, 피의자
  - 통계작성자는 각 범죄통계원표(발생, 검거, 피의자)에 근거하여 작성 및 승인한 보고대상 전체의 데이터를 집계
- 작성기간 이후의 시점 자료를 고정하여 작성하므로 통계작성대상 변동 발생 경우는 없음

## 3. 통계작성 개편

- 개편의 필요성
  - 196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 그대로 유지되어 최근의 범죄동향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불가
  - 신종범죄유형 등 최신 범죄동향을 반영하여 통계 산출항목 조정 및 통계 관련 용어 개선
- 통계 개선을 위한 연구·회의 경과
  - '16. 3. 17. ~ '19. 6. 5. 통계원표 개별항목 논의 경·검 실무협의(22회) 진행
  - '21. 11. 24. ~ '22. 11. 16. 법률 개정사항, 국회·언론 등 제기하는 통계 개선사항을 통계원표에 추가 반영하기 위한 실무협의(9회) 진행
  - '22. 9. 8. ~ '22. 9. 22.'범죄통계원표 개선안에 대한 각 항목값 추가 및 항목변경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 '22. 8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T/F 운영
- 범죄통계 주요 개선
  - 현대범죄 특성에 맞춰 새로운 항목 신설 및 항목값 개선
  - 피해자 특성에 따른 범죄관리 필요성 대두, 범죄피해자 정보 세분화
  - 기존의 송치의견으로 산출되던 정보를 사법경찰관 결정으로 수정
  - 발생일 특수사정, 범행시 일기, 생활정도 등 범죄와 관련없는 항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입력항목 정리

## IV. 자료수집

###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 범죄통계 생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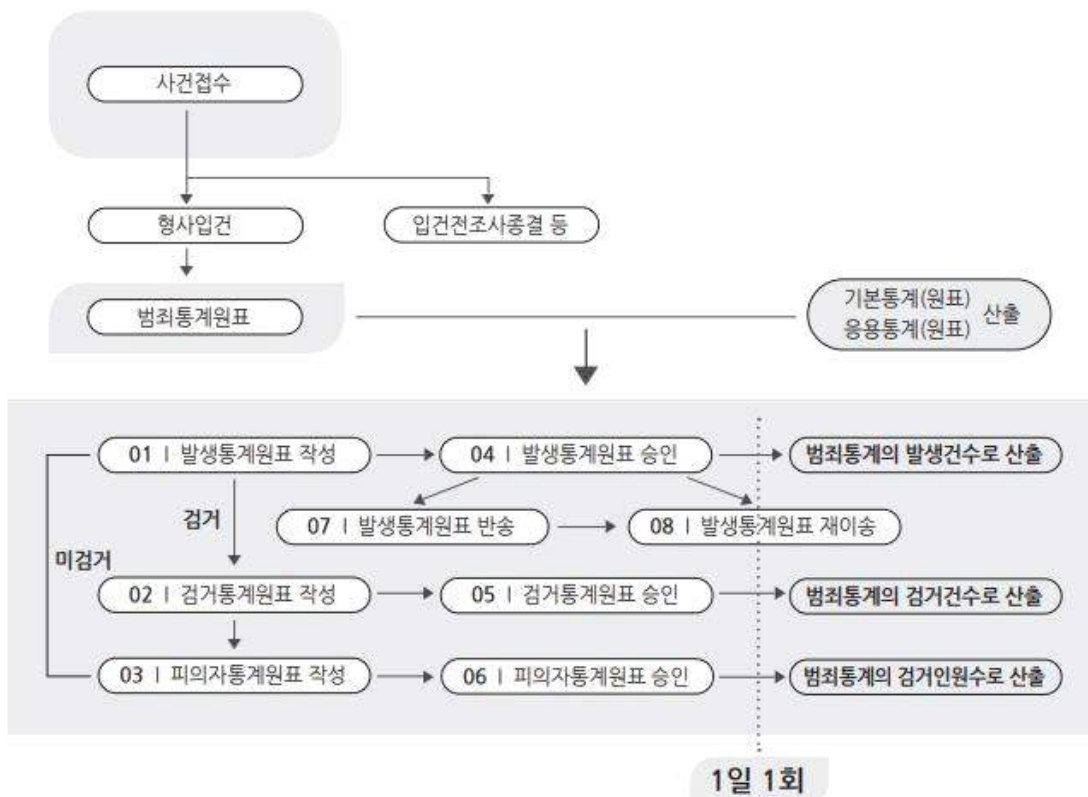
##### ○ 범죄통계원표 작성

- 각하·즉심 등 일부를 제외한 입건 사건 모두에 대해 사건 담당 수사관이 발생, 검거, 피의자 원표를 작성
- 팀장 또는 범죄통계 담당자의 원표 검토와 승인  
1일 1회 00시 통계시스템(CSS)에 새로 승인된 원표 반영작업(배치, batch) 시작, 통상 09시경 시스템상 확인 가능

##### ○ 범죄통계원표 내검, 매년 8월경 오류 수정 후 통계 확정

- 오류로 추정되는 원표자료를 추출하여 작성관서로 하달, 수정 자료를 취합하여 재검토 과정 3회 반복

#### □ 통계작성을 위한 절차 흐름도





##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력담당자가 내용 숙지하여 입력
  - － 경찰범죄통계 작성기준 및 전산입력 요령
- 매년 3월중 범죄통계 자료의 오류수정, 정확도 제고를 위해 통계작성 담당자 대상으로 원표 주요 오류유형 및 작성요령 등을 교육
- 질의응답 및 소통의 시간을 통하여 의견 청취, 건의사항 검토 하여 답변

## V. 통계처리 및 분석

### 1. 자료입력 표준화

#### ☐ 자료의 코딩(부호화) 방법, 코드체계

- 대다수의 항목별 코드가 지정되어 있는 범주형 형태
  - － 예시) 범죄통계 죄명코드체계

자리수	1(version)	2(법률성격)	3~4	5~8	9	10
변인	죄명개정버전 (0~9) [현재 0]	형법 1	형법 각칙순서대로 01~42장	고유번호 (일련번호체계)	미수 1	교사 1 방조 2
		특별법 2			예비 2	
		과태료 3	특별법의 경우 (임의적 번호체계)		음모 3	
		군형법 4			선동 4	
				선전 5		

#### ☐ 전산입력방법, 내용 및 입력오류 검출을 위한 적용방법

- 전산입력 방법 : 사건수사시스템에 통계원표(발생,검거,피의자) 입력
  - － 각급 경찰관서에서 범죄통계원표의 항목별 작성기준 및 전산입력요령에 따라 입력
- 입력오류 검출
  - － 범죄통계 필수입력항목(보고양식의 데이터 항목별 입력 분류 참조) 미 입력시 시스템에서 팝업으로 알림
  - －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범죄통계원표 자료 품질 점검 계획)에 의해 오류유형 및 수정지침 하달하여 오류수정

## 2. 자료내검

### □ 자료의 중복입력, 누락 등에 대한 확인 및 보완 방안

- 시스템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작성과정에서 중복으로 입력되는 경우는 없음
- 전년도 범죄통계를 확정하기 위해 범죄통계원표 자료 품질점검 계획 수립·실시
  - 오류로 추정되는 원표자료 추출하여 시도청·경찰서 담당자에게 하달
  - 「범죄통계원표 오류유형 및 수정 지침」 하달 및 범죄통계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교육 실시

## 3. 무응답

### □ 주요 항목의 불송치의 경우 필수입력사항이 아니므로 미 입력된 자료에 대해 미상 항목으로 분류

- '23년 기준 원표별 주요 항목에 대한 무응답률
  - 산출산식 : 무응답률=(무응답 건수/해당 항목이 입력 가능한 전체 건수)×100  
(단위 : %)

구분	송치관서	죄명	범죄발생장소	지역구분
발생통계원표	0.0	0.0	10.1	0.0
구분	송치관서	죄명	범죄의공범수와범행도구	지역구분
검거통계원표	0.0	0.0	1.2	0.0
구분	송치관서	죄명	피의자범행시약물상용여부	지역구분
피의자통계원표	0.0	0.0	0.6	0.0

## Ⅶ.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공표통계는 고소·고발된 사건을 포함하여 경찰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통계로서 송치·불송치결정 등을 모두 포함한 자료이므로 최종 형사처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통계표는 5년간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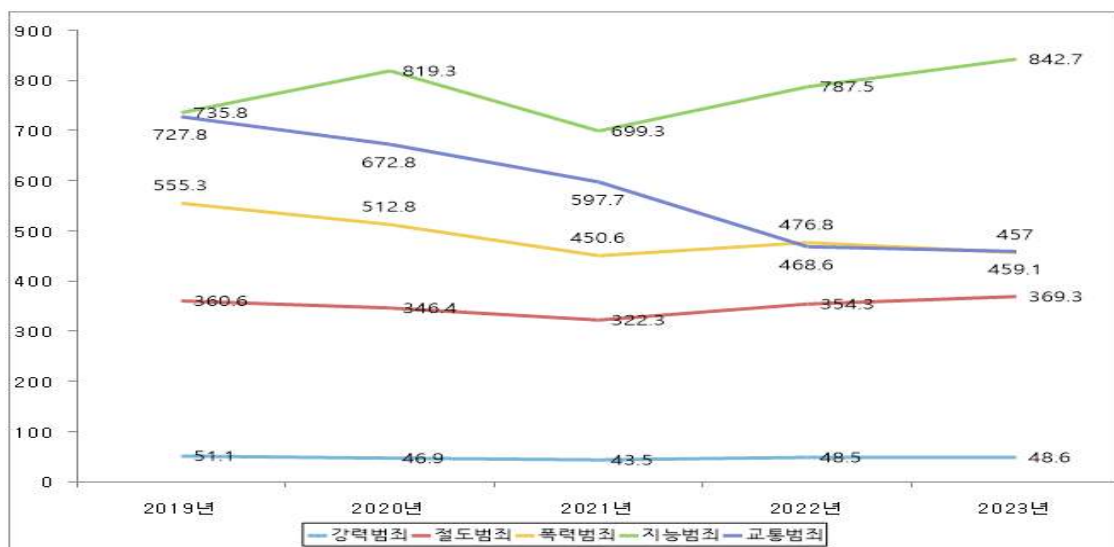
<표-1>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9년~2023년)

단위 : 건

범죄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전체범죄	1,611,906	3,108.8	1,587,866	3063.7	1,429,826	2,768.9	1,482,433	2881.9	1,520,200	2,961.9
강력범죄	26,476	51.1	24,332	46.9	22,476	43.5	24,954	48.5	24,939	48.6
절도범죄	186,957	360.6	179,517	346.4	166,409	322.3	182,270	354.3	189,570	369.3
폭력범죄	287,913	555.3	265,768	512.8	232,661	450.6	245,286	476.8	234,561	457.0
지능범죄	381,533	735.8	424,642	819.3	361,107	699.3	405,105	787.5	432,525	842.7
풍속범죄	21,153	40.8	22,632	43.7	23,360	45.2	27,113	52.7	25,776	50.2
특별경제범죄	51,400	99.1	47,826	92.3	40,708	78.8	48,615	94.5	59,090	115.1
마약범죄	8,038	15.5	9,186	17.7	8,088	15.7	10,331	20.1	15,473	30.1
보건범죄	12,570	24.2	14,595	28.2	16,936	32.8	17,749	34.5	10,822	21.1
환경범죄	3,877	7.5	3,568	6.9	3,656	7.1	3,477	6.8	7,384	14.4
교통범죄	377,354	727.8	348,725	672.8	308,634	597.7	241,029	468.6	235,636	459.1
노동범죄	975	1.9	356	0.7	406	0.8	714	1.4	1,946	3.8
안보범죄	169	0.3	216	0.4	206	0.4	219	0.4	246	0.5
선거범죄	611	1.2	829	1.6	274	0.5	2,969	5.8	751	1.5
병역범죄	12,712	24.5	3,845	7.4	1,823	3.5	4,638	9.0	8,617	16.8
기타범죄	240,168	463.2	241,829	466.6	243,082	470.7	267,964	520.9	272,864	531.6

※ 발생비 = (발생건수\*100,000)/해당년도 주민등록인구수<sup>1)</sup>

<그림-1>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비 추이(2019년~2023년, 단위: 건)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2019년 51,849,861명, 2020년 51,829,023명, 2021년 51,638,809명, 2022년 51,439,038명, 2023년 51,325,329명

- 2023년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1,520,200건이며, 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를 의미하는 발생비는 2,961.9건이었음. 범죄유형별 발생비는 지능범죄(842.7건), 교통범죄(459.1건), 폭력범죄(457.0건), 절도범죄(369.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체로 감소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2022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주요 범죄유형 중 강력범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절도범죄, 마약범죄, 지능범죄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폭력범죄, 교통범죄는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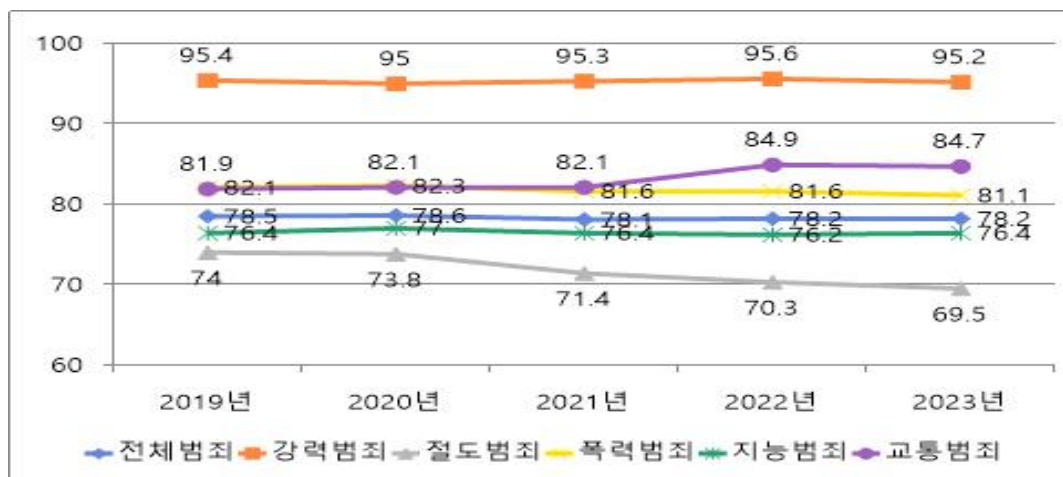
○ 피의자 성별관련 통계

<표-2> 주요 범죄유형별 피의자 성별 인원수 및 구성비 추이(2019년~2023년)

단위: 명 %

구 분	성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전체범죄	남성	1,245,049	78.5	1,174,763	78.6	974,530	78.1	977,984	78.2	978,372	78.2
	여성	340,589	21.5	319,658	21.4	273,150	21.9	272,346	21.8	272,513	21.8
강력범죄	남성	27,626	95.4	25,628	95.0	21,907	95.3	23,913	95.6	23,747	95.2
	여성	1,317	4.6	1,343	5.0	1,085	4.7	1,104	4.4	1,195	4.8
절도범죄	남성	74,979	74.0	72,665	73.8	61,198	71.4	66,345	70.3	69,897	69.5
	여성	26,316	26.0	25,760	26.2	24,489	28.6	27,970	29.7	30,629	30.5
폭력범죄	남성	284,633	82.1	258,549	82.3	215,656	81.6	224,035	81.6	215,074	81.1
	여성	61,928	17.9	55,441	17.7	48,573	18.4	50,638	18.4	50,009	18.9
지능범죄	남성	235,952	76.4	237,060	77.0	160,752	76.4	167,401	76.2	184,786	76.4
	여성	72,830	23.6	70,646	23.0	49,629	23.6	52,299	23.8	57,168	23.6
교통범죄	남성	314,424	81.9	292,808	82.1	255,417	82.1	204,031	84.9	198,401	84.7
	여성	69,293	18.1	63,638	17.9	55,815	17.9	36,185	15.1	35,737	15.3

<그림-2> 주요 범죄유형별 남성범죄자 비율 추이(2019년~2023년, 단위: %)



- 2023년 전체피의자 중 남성피의자는 78.2%로 21.8%인 여성피의자의 3.6배에 이름. 특히 강력범죄는 남성피의자의 비율이 95.2%로 대다수를 차지함. 나머지 주요 범죄 또한 69.5%(절도범죄)에서 84.7%(교통범죄)까지 남성피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 남성피의자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나 변화폭은 크지 않으며, 범죄유형별로 약 80%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함. 다만, 절도범죄에서 남성피의자 비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 절도피의자 비율의 증가 추세를 의미함

- 성인지(성별 관련)와 관련하여 공표하는 관련 통계 항목
  - (발생원표) 피해자 성별 연령
  - (피의자원표) 피의자 범행시 성별·연령, 피의자 범행시 성별 정신적장애 여부, 피의자 성별, 미성년·성년 여부별 전과, 대표피해자 성별 연령, 발달장애 대표피해자 성별 연령, 여성피의자(범행시 연령, 직업, 범행시 전과 여부 및 횟수, 직전처분 종류, 소년 보호처분 상황, 재범종류 및 기간, 공범관계, 범행시 약물 상용여부, 범행동기, 교육정도, 혼인관계, 구속·불구속 상황, 사법경찰관결정), 미성년피의자 범행시 성별 정신적장애 여부, 학생피의자 성별 정신적장애 여부, 전과피의자 범행시 성별 정신적장애 여부, 외국인피의자 범행시 성별 정신적장애 여부, 고령피의자 범행시 성별 연령, 고령피의자 범행시 성별 정신적장애 여부

## 2. 시의성 및 정시성

### 2-1 보고대상 기간/시점과 공표시기

- 보고대상기간 : 1월1일~12월31일(연통계), 분기별 통계(잠정통계)
- 공표시기
  - 연 통계 : 작성기준년도 익년 8월(잠정치 공표하지 않음, 책자발간(연보))
  - 분기별 통계 : 최종별 발생·검거현황(건수,인원)을 보정전 잠정통계임을 명시하여 경찰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에 분기별 공표

### 2-2 공표일정

#### □ 사전에 계획 및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과 공개 방법

- 공표일정 공개 홈페이지 : 경찰청 홈페이지(작성기준년도 익년 8월) 및 국가통계포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누리집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알림/소식 소통/공감 신고/지원 정보공개 법령/정책 기관소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Q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 경찰청범죄통계

경찰청범죄통계

연도별 범죄통계 분기별 범죄통계(잠정)

※ 경찰청범죄통계는 작성기준년도 익년 8월에 공표예정입니다.

2023 Q 확인

목차 및 일러두기

1.목차 PDF 다운로드

2.일러두기 PDF 다운로드

### 3. 비교성

####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2011년 범죄통계부터 범죄분류 변경

- 범죄통계의 목적은 “범죄양상을 정확히 분석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것” 이므로, 범죄통계의 각 죄명분류는 “위반행위속성(범죄행위의 내용적 특징)과 법익침해유형(범죄행위의 결과적 특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을 경우 위반행위속성을 제1분류원칙으로 한다. 해당 기준에 근거하여, 「2010 범죄통계」 이전에는 강력,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형법범죄 및 특별법범죄 등 7개 분야로 구분하던 죄종 대분류를 「2011 범죄통계」 부터 강력, 절도, 폭력, 지능, 풍속, 특별경제, 마약, 보건, 환경, 교통, 노동, 안보, 선거, 병역 및 기타범죄의 15개 분야로 확대했다. 최근 5년간 범죄 실태 파악 및 분석에 중요한 죄종이 순차적으로 추가로 되어 2012년 398개, 2013년 419개, 2014년 459개, 2015년 463개, 2016년 464개, 2017년에 466개, 2018년에 467개, 2020년 469개, 2021년 472개, 2022년 480개, 그리고 2023년은 489개의 죄종 소분류가 확정되었다.

####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 유무

- 2011년 범죄통계부터 범죄분류를 기존 형법·특별법 분류체계에서 위반행위속성과 법익침해유형별로 재분류
  - 2011년 범죄통계의 죄종분류 변경으로 2010년 이전의 ‘강간’ 범죄는 2011년 ‘강간 강제추행’ 2013년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 강제추행등’의 4가지 유형의 중분류로 세분화되었다. 새로 신설된 중분류에 포함된 성폭력 범죄에는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아동학대 범죄 등이 있다.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은 “성풍속범죄”로 성매매 관련 위반행위는 “기타 범죄”로 분류하였다.

### 3-3 국가간 비교성

- 미국의 범죄통계 현황
  - FBI를 중심으로 각 지역 경찰에서 우리의 통계원표와 유사한 표준범죄보고(UCR)를 기반으로 심층분석을 위해 세부자료를 입력하는 사건기반시스템(NIBRS) 운영 통계 보완
    - ※ NIBRS : 범행·피해품·가해자·피해자 등 단위별 및 범죄유형별 특성있는 자료 입력
  - 대다수의 국가에서 범죄백서의 형태로 범죄통계를 발간하고 있으며, 형사법 체계와 범죄분류체계가 상이하여 국가간 직접 비교는 불가

## 4. 일관성

### 4-1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 범죄통계원표(발생,검거,피의자)에 입력된 범죄발생사건, 검거, 피의자에 관련된 정보를 집계하여 범죄분석통계 작성
  - 경찰(해경포함), 특별사법경찰 데이터와 통합하여 통계작성 하므로 경찰청 범죄통계 작성 후 자료 수령하여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작성하므로 공표일정이 매년 4분기

### 4-2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 <경찰청범죄통계> 데이터의 정확성 및 연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오류점검 후 전문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확정 통계를 연단위로 발표·제공
  - 「경찰청범죄통계」는 원표 데이터를 추출하여 보정 후에 확정하여 사용하므로, 공표 이후에는 변경되지 않는 신뢰성이 있음
  - 분기별 잠정통계는 보정이 필요한 잠정통계임을 명시 후 최종별 발생·검거현황(건수,인원)만 경찰청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 공표

## 5. 통계활용 실태

- 이용자 접속회수 파악 불가

## Ⅶ.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 1. 통계작성 문서화

#### □ 통계작성 절차

- 통계작성 기본계획 : 「범죄통계」 발간계획서 작성
- 자료수집 방법 : 시스템을 통한 자동 집계
- 자료입력/내검 지침서
  - 경찰청에서 오류로 추정되는 원표자료를 추출하여 작성관서로 하달
  - 각 경찰관서의 담당 수사관이 이를 확인하고 원표자료 수정
  - 수정자료를 취합하여 재검토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며 오류 수정
- 현장조사관리 : 시스템을 통해 집계됨으로 해당없음
- 공표자료 제공 방법
  - 홈페이지 등재(<https://www.police.go.kr>), 국가통계포털 등재(<https://kosis.kr>)
  - 매년 8월중 700여쪽의 「범죄통계」 책자 발간(각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 500여부 배포)

### 2. 접근성 및 명료성

#### 2-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
  - 경로 : 메인→정보공개→공공데이터→경찰범죄통계
  - 유형 : PDF파일 제공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경로 : 메인→국내통계→기관별통계→중앙행정기관→경찰청→경찰청범죄통계
  - 유형 : EXCEL, CSV, TXT, SDMX(2.0) 제공 가능

#### 2-2 통계 설명자료 제공 [작성개요~참고자료]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 경로 : 메인→정보공개→공공데이터→경찰범죄통계 PDF파일(일러두기, 범죄개요 및 주요 지표범죄 분석)
- 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dp 에 통계 개요, 용어해설, 유의점 등 수록



### 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원칙적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하지 않음
  - － 『형사사법절차 전산화 촉진법 제6조 3항』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 4. 비밀보호 및 보안

#### 4-1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4-2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의 유실, 유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키보드보안, 웹페이지보안, 웹구간 암호화, 보안툴킷, 보안OS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